

아베담화의 분석과 전쟁법안 처리 이후의 일본 시민운동의 전망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 I. 일본의 정치변동과 한반도의 운명
- II. 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실패와 아베정권의 등장
- III. 제2차 아베정권의 성격과 전후70년 아베담화의 의미
- IV. 아베내각의 [전쟁법안]처리와 향후 일본시민운동의 전망

I. 일본의 정치변동과 한반도의 운명

일본시민사회가 [전쟁법안]과 아베정권에 대해서 폭발하였다. 지난 8월30일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에 의한 항의행동이 있었다. 일본 전국에서 모인 약 12만명의 사람들로 도쿄 나가타초의 국회의사당 앞과 주변을 가득 메웠다. 나가사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고베에서 신칸센을 타고 온 사람,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전쟁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국회 앞에 모여들었다. 2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였지만, 1시에는 경찰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국회정문 앞의 도로 앞으로 대중들이 진출하였다. 국회정문 앞으로 대중들이 진출한 것은 60년 대 안보투쟁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공식행사에서는 4개 야당 대표들의 연대선언, 저명한 평화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연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 s)의 전쟁법안 반대 퍼포먼스가 전개되었다. 같은 시간에 전국 300여 곳에서 [전쟁법안 반대 아베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자는 떨어지는 빗물 속에서 감격에 겨워 말을 잊지 못하였다. “12만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100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쟁반대! 아베반대!”

항상 침묵하고 지켜만 보고 있던 부동의 일본 시민사회가 드디어 전국적으로 일어선 것이다. 혁명은 아니더라도 혁명적인 순간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것 같지만, 이러한 남녀노소를 불문한 전국적인 대중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베내각의 퇴진과 안보법안의 폐안은 그리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성립이후에도 이러한 저항운동이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시점에서 왜 일본시민사회는 침묵을 깨고 일어난 것일까? 대중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베내각은 왜 일방적으로 안보관련 법안성립을 멈추지 않는가? 이러한 대립된 정국 속에서 발표된 전후 70년 아베담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나하나 간단한 질문들이 아니다. 일본사회의 정치적 변화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운

명과도 깊게 연관되어 왔다. 현재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전개방향을 주시하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II. 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실패와 아베정권의 등장

아베내각은 일본의 보수정치의 지형으로 보면 극우보수에 가깝다.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은 결국 전후 일본 정치세력 중에서 혁신세력 및 중도(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약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후의 일본정치를 지배한 것은 소위 [55년 체제]이다. 1955년에 사회당 좌우파가 통합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재계 및 보수세력은 민주당과 자유당을 통합하여 자유민주당을 창당했다. 이후 국회에서 약 40여년간 절대다수를 유지해왔다.

1993년 신당연합인 호소카와 정권에 의해 일단 정권을 잃은 자민당은 사회민주당과 연립정권을 성립시켜 집권당에 복귀하였다. 1996년에는 하시모토내각을 성립시킴으로서 수권정당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하지만 재집권한 자민당의 보수주의는 정치 및 경제개혁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그러자 2001년에는 자민당 내의 비주류에 속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지지하였다. 고이즈미는 “자민당을 부수겠다”는 그의 언술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보수정권은 다시 한 번 연명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이즈미 내각은 우체국 민영화 등 개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표방하면서 빈부격차를 가져왔으며, 일본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료정치와 재벌정치의 벽을 넘지는 못하였다. 그는 이라크파병을 강행하고, 집권 5년간 야스쿠니신사를 매년 참배하는 등 실질적인 보수우익의 노선을 표명하며 아베정권 등장의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90년대 냉전붕괴 및 사회주의진영의 몰락이후 사회당 및 공산당 세력의 약화 속에서 호헌세력의 축이 무너져 내렸다. 고이즈미 내각의 성립 이후에는 자민당내의 중도보수세력의 약화 및 우경화가 뚜렷해지고, 자민당 내 우익세력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2006년9월, 고이즈미 정권의 토대위에서 등장한 제1차 아베내각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후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이전으로 복귀를 표명하였다.

제1차 아베내각은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헌법개정정책으로 야당 및 일본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게다가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후유증을 받아 안았다. 결국 제1차 아베 내각은 붕괴하였다. 이것으로 자민당의 보수주의 정치는 실질적으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자민당을 대체하는 일본보수정치는 오자와 이치로 등 자민당에서 탈당한 자유주의 보수세력, 센고쿠 민주당 간사장 등 사회당에서 탈당한 혁신세력, 그리고 칸 나오토 등 시민운동 그룹이 결합한 민주당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갔다. 민주당은 집권 자민당을 심판하자는 논리로 2009년 역사적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을 성립시켰다.

하지만 하토야마내각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현외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조기 붕괴하였다. 하토야마 내각의 실패에는 외무성을 비롯한 친미파 관료들의 방해의 영향도 컸지만, 천안함 침몰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유사사태]의 외부적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민당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온 공공사업을 중지하고 빈곤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타당하였다. 하지만, 무모한 재정계획과 추상적인 정책내용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 게다가 2011년 3.11(대지진, 쓰나미, 방사능피해)의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총체적인 정권운영의 무능함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서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잃어버린 경제 20년, 3.11이후의 국가적 위기사태의 봉착, 사회당 및 공산당의 혁신 세력의 붕괴, 자민당 내의 자유주의 보수세력의 개혁의 한계, 민주당의 중도보수 세력의 무능력과 집권실패는 일본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토대위에서 제1차 내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은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일본의 국민들은 전후 국가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새로운 대안사회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전후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강한 일본사회를 되찾는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아베정권은 국가위기의 대중심리 속에서 내셔널리즘을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한 파시즘적 요소를 잉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파시즘적 요소의 기반인 내셔널리즘을 아베내각에 제공한 것이 '뺏속까지 친미, 친일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독도방문이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Ⅲ. 제2차 아베정권의 성격과 전후 70년 아베담화의 의미

2012년12월에 등장한 제2차 아베내각은 제1차 아베내각과는 달리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련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먼저 헌법개정과 안보법안 등의 정치적 과제보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우선시 하면서 국민의 지지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미디어 전략을 철저히 활용하면서 NHK를 비롯한 주요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셋째, 소위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과거 좌파운동권세력을 측근으로 활용하면서 반대파들의 논리에 적극적인 대항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넷째 일본회의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의 멤버를 내각에 전면 기용하여 각 분야에서 보수우익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제2차 아베내각은 정책결정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개월에 걸친 회의 끝에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아베담화를 준비하면서도 아베수상은 2월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베담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의 내용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는 이미 멤버의 구성에서부터 아베수상의 최측근이나 보수우익의 인사를 임용하였다.

아베내각은 정책결정 프로세스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대한 압력과 조작,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 다수의 폭력적인 정책집행은 아베내각을 독재정권, 비민주주의정권, 의회파괴주의 등으로 부르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은 제2차 아베내각을 두 번 다시없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파악하고 있다. 모든 정책을 타임 테이블을 맞추어 놓고 타협 없이 시나리오대로 실시하는 일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보법제의 성립은 이들의 숙원인 헌법 개정과 군사적 자립노선을 위한 포석이다. 2015년8월14일 발표된 아베담화는 교육과 역사인식에 있어서 정치적 자립을 기획하고 있는 보수우익의 역사인식을 보여준다. 아베담화가 장문의 추상적인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아베담화는 역대정권의 담화를 계승했다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성격은 전혀 계승하지 못했다. 담화를 분석할 때 침략 전쟁의 성격, 식민지배의 인식, 반성과 책임의 표현이 핵심요소이다. 아베담화는 [침략전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일본의 주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세계적인 열강들의 식민지각축이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하였더라는 외부적인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표현해 왔다”는 과거형으로 표현하였다. 아베수상 자신의 언어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형태는 피하였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부터 결별해야 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다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연합군과 중국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사죄는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아베담화는 한국에 대해서는 교전국가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식민지 영토였다는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1910년의 강제 합병에 대해서도 강제성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식민 지배였다는 인식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아베수상의 인식은 전후 보상과제에 대해서도 연합군 포로와 중국에서의 일본민간인 잔류, 시베리아에서의 일본군인의 역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동일한 문제들에 연관된 조선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인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후보상의 추가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담화전체의 2곳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아베담화에서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은 채, 아베수상이 유엔 및 미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전쟁과 여성의 보편적인 피해문제로 대체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아베수상의 역사인식의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점에서 해결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담화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을 실현하였다.

이외에도 아베담화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ODA의 군사적 전용을 추진하면서도 ‘적극적 평화주의’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아베담화는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모순된 표현이 많고, 아베수상이 역대 발언해 왔던 내용과의 괴리도 심각하며, 실질적인 정책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진심어린 담화라고 보기가 어렵다. 아베담화에 대한 일본의 지식인들과 언론조차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도 없고 문제의식 및 철학도 부족한 담화’라고 지적하면서, ‘이럴거라면 무엇하러 발표하였는가’라며 혹평하고 있을 정도이다.

아베담화는 안보법제 정국과 맞물리면서 애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이 추천한 헌법학자조차도 안보법제는 위헌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안보법제처리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국회심의일정을 9월말까지 연장하게 되어, 아베담화는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회기 중의 담화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연유로 아베수상은 안보법제의 통과를 위해서도 야당과 주변국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당위감속에서 결국 타협적인 담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인다.

아베담화속에서 “러일전쟁은 아시아의 식민지해방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극우세력들에 대한 배려와 ‘식민지, 침략, 반성’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삽입하면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배려를 보이고도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한국에 대한 배려는 일체 보이지 않는 담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베담화의 내용에 박근혜정권의 대일 외교가 영향력을 미쳤다고는 일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아베담화는 애초의 기획과는 달리 외부의 압력과 주체의 흔들림에 의해 ‘실패한 쿠데타’작품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 실패한 쿠데타 속에서도 그들은 한국만은 정확히 확인 사실한 잔인한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아베내각의 [전쟁법안]처리와 향후 일본시민운동의 전망

아베담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원칙론적 입장을 볼 때 의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9월 이후 전개되는 대중, 대미외교와 함께 대일외교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을 포함한 관계개선을 기대하겠다는 포석으로 엿보인다. 한일정상회담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좀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안보법제와 북핵 위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직결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재편이 단일전장개념에 입각한 한미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의 대일외교가 역사문제만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지점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베내각의 안보법제의 강행처리는 아베내각의 적극적인 의도라기보다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헤노코로의 미군기지이전과 안보법제의 처리는 아베내각의 생명줄과 같다. 만약 이 두 사안의 해결이 어려워 보이면 아베내각의 연명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베내각이 ‘묻지마 강행처리’의 모습으로 일관하

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과 그 압력을 이용하면서 안보의 자주노선을 추구하려는 보수우익세력들의 이중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일체의 무력행위를 금지하는 헌법9조의 틀 속에서 50년대 중반부터 개별적 자위권에 한해서는 헌법의 해석을 바꾸면서 까지 그 행사를 인정하기 위해서 합리화시켰다.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 개정이후에는, 자위대의 미군지원에 대한 무력행위를 개별적 자위권 영역의 틀 속에 꿰맞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특별법과 쟁변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쟁변이 국민들에게 통용되었다. 일본국민들이 헌법9조의 틀 속에서 개별적 자위권적인 무력은 제한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총체적인 전쟁참여가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은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민당 내의 보수세력의 기본 원칙을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제처의 판료를 해임하고, NHK의 사장을 우익인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각결정의 형태로 집단적자위권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2015년5월 아베수상의 방미이후 합의한 미일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이 동맹국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제3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도 가능케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보법제가 통과되고 나면 헌법9조에 의해 일본은 제한적 무력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야당 및 국민들을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및 일본의 극우보수 세력에게 있어서 아베내각이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천재일우과 같은 이번 기회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 및 시민운동세력도 안보법제의 실현은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미국의 전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전쟁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위기에 빠진 아베내각을 박근혜정권이 역사문제로 고립시키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아베내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의 측면보다는 안보법제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표현하고 한미일 보수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아니라고 보인다. 아베담화의 분석에서 보이듯이 한일정상회담 속에서 아베내각이 한국에 양보할 수 있는 역사인식 및 전후보상 문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8월30일 10만명이 넘는 일본 시민들이 국회 앞 정문에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내각이 추진하는 안보법제의 폐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시민들의 데모역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첫째 의회 내에서의 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 둘째 자민당과 야당전체를 통틀어 현재 아베수상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셋째 야당과 시민운동의 집회가 전쟁반대 및 민주주의 수호의 구호는 선명하지만,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보법안 반대진영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SEALDs의 젊은층의 운동속에 '전쟁은 싫다, 평화가 좋다', '민주주의 지키자'라는 슬로건은 존재해도, 아시아 침략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슬로건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젊은 대학생들은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등장한 이후의 보수적인 역사교육을 받은 세대이고 또한 근현대사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대학생들 주축으로 한 SEALDs의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일본의 전후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사회운동이 어찌면 마지막 희망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어떤 대중조직이나 정치조직에 속하지도 않고 역사교육 및 사회과학의 학습도 받지 않은 비정치적인 이들 세대가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문제제기를 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대중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안보법안의 성립이후에도 일본의 평화운동 및 사회운동을 이끌어 갈 대중적 기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의 사회운동이 진정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현외로 이전하고, 미일안전보장 조약을 개정하고, 안보법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본의 안보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평화운동이 한반도의 분단모순의 해결과 아시아의 냉전구조의 해체를 일본의 평화운동의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일본의 안보법제의 폐기를 위한 한일연대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새로운 사회운동에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연대하고 이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의 폭주로 인해 안보법제는 성립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일 간의 새로운 평화세대들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일본의 평화헌법9조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라는 공동의 과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2015/09/01)

※코리아연구원(이사장: 박영재 / 원장: 김창수)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CMS자동이체

사무처로 전화(02-733-3348)주시면 이메일로 CMS자동이체 회원약정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송금

우리은행 1005-100-937962(예금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